공간과사회 2020년 제30권 1호(통권 71호): 5~9
http://dx.doi.org/10.19097/kaser.2020.30.1.5

편집의 글 (editorial review)

인류세 시대, 한국의 녹색전환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in the era of Anthropocene

이상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전면적으로 우리 삶의 시스템과 제도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른바 '전환'(transformation)의 시대를 살게 된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야생동물들의 서식처가 사라지고, 숙주를 찾지 못한 미생물들이 새로운 숙주로 인간을 선택한 것이 조류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확대로 나타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세한 바이러스 같은 비인간행위자(non-human agency)의 행위가 전 지구적 스케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개발 패러다임을 당연시하면서 자연과 사회를 과도하게 이용하고 착취한 근대사회가,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이라는 성공의 결과 직면하게 된 생태적 결과이자 사회적 결과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스템 혹은 사회주의 시스템의 차이는 있지만) 근대적 개발이 초래한 행성적(planetary) 결과물에 대한 진지하고 시급한 반성이

* 한신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사회혁신경영대학원 부교수(ttochi65@hs.ac.kr)

www.kci.go.kr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번 ≪공간과 사회≫ 특집의 첫 번째 주제는 '인류세 시대, 한국의 녹색전환'으로 잡았다. 개발 패러다임을 매우 우수하게 실행해 온 개발국가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생태주의적 성찰을 통해 '이른바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특집에는 세 편의 논문이 실렸다.

첫 번째 논문은 최병두 교수의 「인류세를 위한 녹색전환」이라는 논문이다. 인류세(anthropocene)는 인간이 지구시스템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연의 위대한 힘과 경쟁하면서, 지구환경에 심원한 변화를 초래하였음을 의미한다. 인류세 담론은 자원·환경문제나 생태위기와 관련하여 제시되었던 어떠한 개념들보다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지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질시대를 초래한 지구적 생태위기가 어떤 집단(계층이나 국가)이나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유발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모호하게 하면서 그 원인과 책임을 보편적(종적) 인류에게 전가한다는 약점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근본 문제를 제기하는데, 첫째는 서구의 근대성에 내재된 사회와 자연 간 이원론적 인식론의 한계, 둘째는 근대성에 기반을 두고 산업화·도시화를 추동했던 자본주의적 사회-자연의 문제이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와 자연 간 이원론적 인식론이 초래한 문제점들을 열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과 사회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다양한 논의들, 예컨대 포스트휴머니즘, 신물질주의, 신인간중심주의 등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면서 각각의 장점과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자본 축적을 위하여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사회생태적 모순을 설명하고 나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 각 분야의 녹색전환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즉, 지구적 생태위기를 초래하거나 또는 이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공간적 문제들은 단지 자본주의의 계급적 요인만이 아니라 젠더와 인종 등 다른 비계급적(그러나 계급과 밀접하게 연계된)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사회경제체제를 재구성하는 녹색전환의 과제는 사회-자연체계와 관련된 규범적 내용들(예컨대 사회생태적 정의, 공간환경적 불

www.kci.go.kr

평등의 완화, 사회-자연적 소외 극복과 상호인정 등)과 함께 사회경제체제 및 지구 시스템의 위기 경향들을 초래한 원인들을 밝히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논문은 김수진 박사의 「환경국가의 발전과정과 녹색전환」이라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안드레아스 두이트(Andreas Duit)의 환경국가 개념을 사용하여 OECD 및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환경국가의 발전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3세대 환경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환경국가란, 환경 관련 규제나 조직을 갖추고 환경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1970~1980년대 환경 관련 법, 제도, 조직 등을 구축하고 환경기준을 수립하여 가시적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국가를 1세대 환경국가로 정의한다면, 2세대 환경국가는 1990년대 기후변화 이슈가 본격화된 이후 이산화탄소 감축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 탈탄소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이다. 2세대 환경국가의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합의제 민주주의와 이해관계자 대표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 합의를 끌어내는 조합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민주주의의 영향력이 '환경위해(environmental health)'와 같은 가시적 환경 공공재에서는 미미하지만, '생태계의 생명력(ecosystem vitality)'과 같은 비가시적 환경 공공재에서는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가 소개되어 있다. 즉, 기후변화, 생물종다양성 등 비가시적 환경문제 대응에는 탈물질주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이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비례대표제와 합의제 민주주의가 환경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 것도 흥미롭다. 조합주의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유럽의 환경복지국가 모델의 경우, 생태발자국 수치가 높아 생태위기 대응에 근원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해자와 기후변화의 피해자 사이에 시공간적 비대칭성이 발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김수진 박사는 녹색전환을 위한 3세대 환경국가의 비전을 '이중의 탈상품화'와 기후변화에 있어 국가의 '확대된 책임'이라는 개념으

www.kci.go.kr

로 제시한다. 이중의 탈상품화란 복지정책에 의한 노동력의 탈상품화와 환경정책에 의한 경제발전의 탈상품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의 '확대된 책임'이란 개별 국가들이 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기후변화에 대해 시공간적으로 '확대된 책임'을 인식하는 도덕적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기후변화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논문은 필자가 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이다. 이 논문은 다른 논문과 달리 전환의 개념을 'transformation'보다는 'transition'으로 보고 있다. 물론 급격한 전환(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비전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였고, 단기간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에 좀 더 논의의 무게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개발 패러다임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한 개발국가 한국이 경제규모의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사회적, 생태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한국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녹색전환(green transition)'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로는 다양한 녹색국가론과 생태복지국가론 등을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녹색전환'이라는 용어에서 '녹색'의 의미는 생태민주주의 담론을 의미한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환'은 전면적 개혁(transformation)을 지향하면서도 점진적인 실천의 지평을 확대해가는 변화(transition)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전환이론들을 간략하게 스케치하고, 각 전환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자원을 가지고, 신자유주의가 고착화된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형평성, 미래성, 생태성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지속가능성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녹색전환 전략들을 각각 형평성(그린뉴딜, 기본소득), 미래성(미래세대를 위한 정치시스템, 토지의 공유자원적 성격 제고), 생태성(생태용량을 고려한 개발, 개발 패러다임의 도시편향성의 극복)의 제고라는 목표에 맞춰서 제시하였

www.kci.go.kr

고, 통합적 전환정책의 프로세스에 따라 실천단계를 제시해 보았다.

세 개의 논문이 동일하게 한글로는 녹색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지향점이나 전략이 다르고, 추상성의 수준도 조금씩 다르다. 인류세라는 매우 거시적이고 지질학적 시간을 담고 있는 개념에서부터 니치(niche)라는 매우 미시적이고, 단기간의 집중적인 노력의 투여가 필요한 개념에 이르기까지 개념의 층위도 상이하다. 이처럼 이번 특집 편에 실린 논문들이 보여주는 녹색전환의 모습은 무척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충분히 공인되지 않은 주장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어지는 연구들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쪼록 이 논문들에서 제시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인류세 시대의 녹색전환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는 이론적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www.kci.go.kr